

2017년 업무계획

---

# 안전한 환경, 행복한 국민

---

2017. 1. 9



환경부

## ☐☐ **보고 순서** ☐☐

I. 지난 4년의 평가 .....	1
II. 정책추진 여건 .....	4
III. 환경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.....	8
IV.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성과확산 방안 .....	26

# I. 지난 4년의 평가

환경현안 해결, 환경 서비스 확대 등  
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불안 여전

## 지난 4년의 평가

### 환경현안 해결 노력

-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('16.5월 ~)  
\* 의료·장례비→생활·간병비까지
-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수립('16.6월), 시행 중
-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합의('15.6월)

### 환경서비스 확대

- 노후 상수도 정비 국고 지원결정('16.3월, '17년 512억원)
-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완공('15.12월)  
\* '17년 5개소 완공, 5개소 추가선정
- 생태관광지역 확대 및 성공모델화  
\* ('13) 12개소 → ('16) 20개소(누적)

### 선진 환경제도 마련

-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시행  
\* 화학사고 사상자수 : ('13) 934명 → ('16) 742명
-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 
\* 환경책임보험 가입 98%('16.12월)
- 통합환경관리법('17년 시행), 자원순환법('18년 시행) 제정  
※ 국정과제 입법현황('16.12월) 환경부 100%(19건)

⇒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새로 도입된 선진 환경제도에 대한 현장 이행기반을 구축할 필요

**참고**

**환경정책 성과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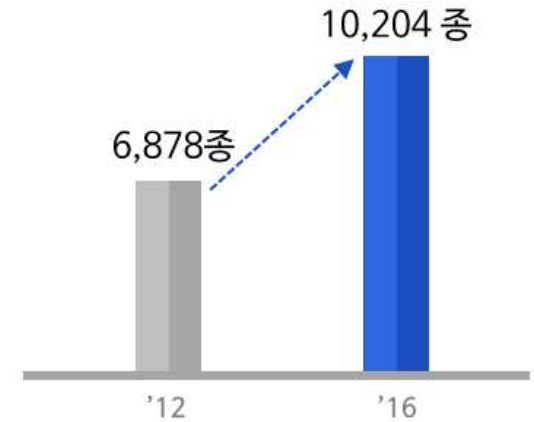
**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·지원자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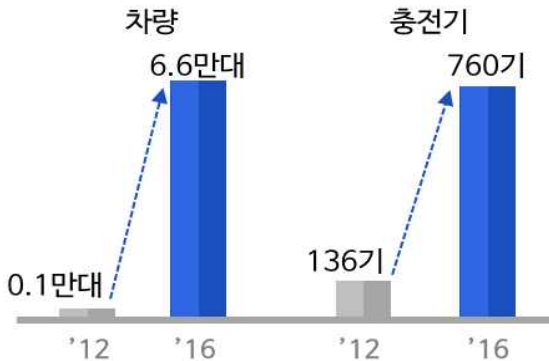
**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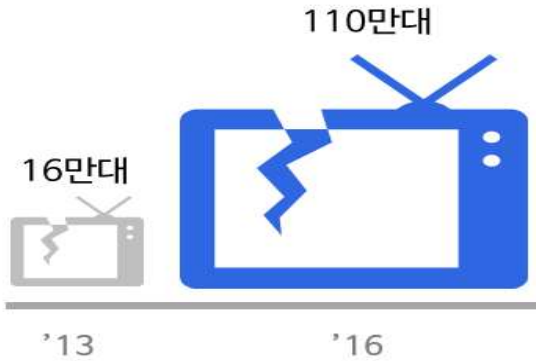
**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물질수(누적)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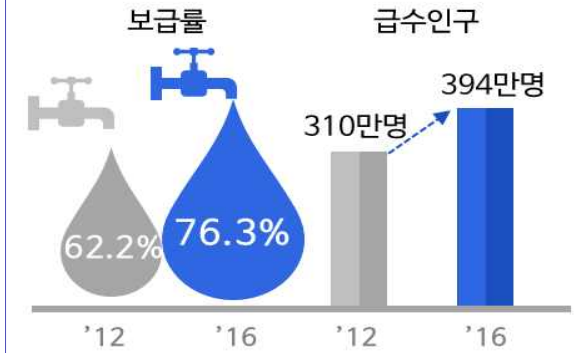
**친환경차 보급대수(누적)**



**폐가전제품 무상 수거량**



**농어촌 상수도 보급현황**



## Ⅱ. 정책추진 여건

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,  
환경관리 여건은 금년에도 쉽지 않을 전망

## '17년 정책추진 여건

### 환경 위해(Risk)에 대한 국민불안 계속

○ 국민들은 미세먼지,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

\* 불안응답 비율 : ①황사·미세먼지(80%), ②유해화학물질(65%), ③기후변화(63%) ('16.11월, 통계청 사회조사)

### 환경관리여건은 녹록지 않을 전망

○ 평년대비 강수량 부족, 기온 상승 전망 등으로 미세먼지·녹조 등 관리에 어려움 예상

###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

○ 대선 등 불확실한 정치상황에서 경쟁적 개발공약 제기 전망

### 기후변화·생물다양성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전략적 대응 시급

○ 신기후체제 후속협상 착수, 나고야의정서 비준 확대 등 새로운 국제 환경규제 논의 가속화

\* '16.11월 파리기후협정 발효 → '17.5월까지 감축공약 이행검증, 탄소시장 운영 등에 관한 각국 입장 제출

## 참고 1

# 정책고객의 목소리와 국제사회 평가

### 일반 국민

“**미세먼지 해결 좀 해주세요!** 이 땅에서 맘껏 공기마시며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없게 되어버렸네요.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.”

“**꼭 가슴기살균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** 바쁘네요. 사고 터지기 전에 사고 만나게끔 하면 어디 덧나시나?”

### 산업계 등

“숨돌릴 틈이 없이 **매머드급 규제**가 동시에 시행되어 대응이 어렵습니다.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, **장외영향평가 컨설팅 지원**도 해주세요 “(A社)

“국내 물기업은 매우 영세한 편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물산업이 블루골드로 떠오르는 가운데 **내실있는 물산업 육성책과 인프라**가 필요합니다” (B교수)

### 언론

“환경이슈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**정책수립이나 홍보가 사후 처리방식 위주.** 언론·정책고객과 더 자주, 사전에,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당부” (C언론사)

### 국제 사회

“환경피해 보상·책임제도 강화에 **관목할만한 진전(Remarkable Progress)!**”  
(‘16.11월, OECD 환경성과평가)

“**환경질** 지수는 OECD 38개국 중 **37위에 그쳐**” (‘16.6월 OECD 삶의 질 지수)



언론 (30개 언론사 기사·보도)



1. 가습기살균제 (43.8%)
2. 미세먼지 (24.0%)
3. 폭스바겐 (16.9%)
4. 전기차 (5.0%)
5. 화학제품 (4.8%)

\* 10대 환경 이슈·정책 기준

일반 국민 (SNS 등)



1. 미세먼지 (1만6,318건)
2. 가습기살균제 (1만4,895건)
3. 차량 (1만3,550건)
4. 4대강 (9,583건)
5. 배출가스 (9,210건)

## Ⅲ. 환경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

환경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,  
환경서비스의 체감성과를 높이고 미래 환경수요에도 대응

## 환경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

### 4대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

#### 1.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.

- ① 미세먼지 감축
-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
- ③ 선제적 녹조 대응
- ④ 지진 및 기상 예·경보 고도화

#### 3. 미래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- ①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
- ② 환경 신산업 발굴·육성
- ③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
- ④ 노후 환경 인프라 현대화

#### 2.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 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.

- ① 소음·악취·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
- ②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
- ③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
- ④ 친환경 소비·생활기반 구축

#### 4. 새로운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환경질을 개선하겠습니다.

- ①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정착
- ②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
- ③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 마무리
- ④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

# 1.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.

1

## 미세먼지 감축

### 예·경보 체계 혁신

- 인공지능 활용 예보모델 시범운영(4월)  
\* 과거 기상·대기자료 등과 인과관계 학습→미래예측
- 황사·미세먼지 통합 예·경보(1월)
-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(191개→287개, 누적)

### 국내 배출원 감축

-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 마련(8월, 부처합동)
-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\*(2월)  
\* 9기, 기존대비 최대 5배
-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(('16)4.8만대→('17)6만대)  
및 수도권 운행제한\*(1월~서울, '20년까지 확대)

### 한·중 협력 강화

- 중국 동북부지역 대기오염 공동연구 착수(4월)
- 중국 대기질 정보 실시간 수신 확대(4월)  
\* ('16) 35개 도시 → ('17) 74개 도시
- 공동저감사업 확대(('16) 3개성 → ('17) 5개성)

### 고농도시 비상조치

- 수도권(행정·공공기관) 차량2부제(2월~)
- 공사중지,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(2월~)
- 야외수업 중지, 휴교권고 등 대응조치 강화  
\* 취약계층 보호 매뉴얼 개정(1월)

예보정확도(고농도) '16년 63% → '17년 70%, '21년까지 선진국 수준달성(PM<sub>2.5</sub> 23→20 $\mu$ g/m<sup>3</sup>)

## 2

#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

### 유통제품 조사·퇴출

-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완료·공개(6월)
  - \*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가 높은 제품 리콜
- 위해우려제품 확대 및 안전기준 모니터링
  - \* ('15) 15종 → ('16) 18종 → ('17) 27종(누적)

### 화학물질 유해성 관리 강화

-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\* 체계 구축
  - \* 고위험물질은 '19년까지 조사·분석 완료
- 화학물질 판매시 유해성 정보제공\* 의무화
  - \* 원료 제조자 → 제품 제조자

###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

- 유해성 검증없는 살생물제품 시장출시 불허
  - 안전이 확인된 물질 이외 제품사용 금지
    - \*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질명 표시 의무화
- ⇒ '17년 정기국회에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

###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

- '16년말 기준 미판정자 4,438명 연내 피해조사·판정 완료, 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\* 확대
  - \* 태아피해(1월) → 천식 등(4월)
- 건강 모니터링 확대(1~3단계→4단계 추가, 1월) 및 온라인 전주기 지원시스템\* 구축(6월~)
  - \* 인터넷 접수, 검사 판정 진행상황 알림, 지원금 신청 등

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반구축 완료

3

### 선제적 녹조 대응

#### 원인규명

- 녹조 발생원인·경로 규명을 위한 현장 실증실험\* 완료
  - \* ('16.5월 ~ '17.12월) 낙동강·영산강 2개소
- 유해남조류 종 확보·배양·연구 인프라(조류은행) 구축(5월, 계획수립)
- 4대강 보 구간 수생태계(36→56개 지점, 누적) 및 생태공원 정밀조사·평가

#### 사전 예방

- 녹조 원인물질(총인) 처리수준을 강화하는 환경기초시설\* 확대
  - \* ('16) 한강·낙동강 중·하류 44개소(총인 70% 감축) → ('17) 대상시설 약 2배확대
- 녹조 우심기간 댐·보·저수지 연계방류(7일 이상\*) 추진(4월, 규정마련)
  - \* 남조류 세포수 22~34% 감소 예상
- 가축분뇨·하폐수처리장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(4월~)

#### 먹는물 관리

- 한강·낙동강 수계 고도정수처리를 제고 (('15) 53% → ('16) 57% → ('17) 60%)
- 소독부산물(총트리할로메탄 등) 저감 정수장 우수 운영기법 발굴·전파(6월~)

사전 예방형 녹조 관리로 먹는물 안전 보장

## 4

## 지진 및 기상 예·경보 고도화

지진 정보  
통보시간 단축

- 지진 관측망 확충  
\* ('16) 156개소 → ('17) 210개소  
(누적)
-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 
전용시스템 구축('11월)

기상 정보  
정확도 제고

- 특이기상 연구센터\* 지정(5월)  
\* 폭염·장마 분야 장기집중 연구
- 한국형 수치예보모델(현업용)  
개발 착수(1월)  
\* 시범모델 개발 및 검증 완료('16)

가뭄·폭염  
맞춤형 정보 제공

- 폭염지수\* 대국민 서비스  
실시(5월~)  
\* 노약자어린이 등 계층별 5단계  
폭염피해 예방정보 제공
- 가뭄 예·경보제 운영  
(1월~, 부처협업)  
\* 기상/농업/생활·공업 3개분야

지진 조기경보 통보시간 50초 이내 → 15~25초 내외

## 2.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 성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.

### 1 소음 · 악취 · 석면 등 생활환경 개선

#### 소음

- 교통소음지도 작성
  - \* ('16) 9개 지자체 → ('17) 12개 지자체(누적)
- 타이어 소음 자율 표시제 도입(9월)
-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확대
  - \* ('16)5,050건 → ('17)5,200건

#### 악취

- 시설기준 강화 (개방형 → 밀폐형)
  - \* 폐기물차 5.7만대 시행(1월)
    - 축사 시설기준 마련(9월)
- 하수도 악취 개선 사업(서울대구광주 18개소)

#### 실내공기

- 어린이집·양로원 등 환경안전진단(1.4만개)
- 실내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(1월, 페인트, 바닥재 등 6종)
  - \*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 물질 방출여부 사전확인

#### 석면

- 지하역사 석면 제거 완료
  - \* '17년 6개소(총 346개소)
-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(2만동)
  - \* 목표(총 10만동) 조기달성 ('16년까지 누적 10.5만동)

폐기물 차량 현대화



현행



개선

취약계층 환경안전진단 (누적)





## 2

# 도심 속 생태공간 조성

### 생태휴식공간

- 자연마당 조성  
\* ('16) 8개소 → ('17) 12개소(누적)
- 생태놀이터 확충  
\* ('16) 46개소 → ('17) 73개소(누적)
- 멧돼지 도심출몰 관리 사업 확대(서울→경기도)

### 생태하천

- 오염·훼손 하천 생태복원  
\* ('16) 1,369km → ('17) 1,469km(누적)
- 옛 물길 복원\* 시범사업 추진(2월 대상지 선정, '18년착수)  
\* 직강화 하천 → 원래 물길 복원
- 하천 생태계 연결 시범사업 착수(2월, 5개소선정)  
\* 보·어도 철거·개량 등 연속성 확보

### 물순환 도시

- (기존도시) 광주·대전·울산·김해·안동  
\* 구도심 지역에 옥상녹화, 투수블럭 등 설치('17~'20)
- (신도시) 세종시(6-3생활권)  
\* 저영향개발기법(LID) 전면도입

### 자연마당 조성사업(광주 월산근린공원)



사업전



사업후

### 생태하천 복원사업(단양 매포천)



사업전



사업후

3

#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

## 홍천 시범사업 성공모델화

- 주변 관광자원 연계
  - \* 야생화단지, 홍천강 등
- 주민 수익사업 발굴
  - \* 퇴비·야생화 이용 화분제작 등
- 맞춤형 체험프로그램

## 국내 확산

- 하반기 중 5개소\* 완공
  - \* 아산·청주·경주·영천·양산시
  - 3개소(인제,음성,제주) 착공(6월), 5개소 추가선정(3월)
  - ※ 산업부(6개소), 농식품부(1개소), 미래부(1개소)('16년말 조성중)
- 종합지원센터 설치(9월)
  - \* 계획수립, 기술진단, 사후관리 등

## 해외 수출

- 중국 생태마을 적용 시범사업 착수(9월)
- 녹색기후기금 등을 활용한 해외 진출전략 마련(6월)

## 친환경에너지타운 기대효과



- '15완공 : 1개소
- '17완공 : 5개소
- '18완공 : 3개소



# 4

## 친환경 소비 · 생활기반 구축

### 자원순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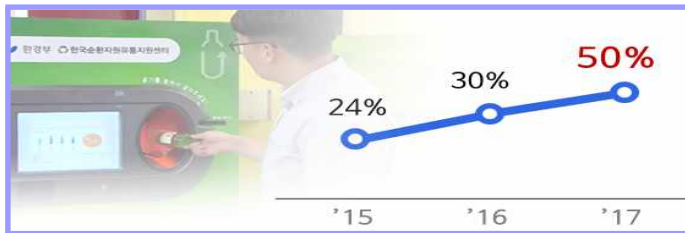
- 빈병 보증금 인상\* 및 무인 회수기\*\* 확충(1월~)
  - \* 소주 40원→100원, 맥주 50원→130원
  - \*\* ('15) 24대→('16) 103대→('17)국산화
-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개선(차량증차, 콜센터 증원 등)
-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\* 확충
  - \* ('16) 284개소→('17) 447개소(누적)

### 자연자원 이용

- 수요자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(5개소)
  - \* 도시민(연천·파주), 미래세대(교과·진로체험), 외국인(DMZ 등)
- 국립공원 명품마을 확대
  - \* ('13)10개→('16)16개→('17)18개(누적)
- 국립공원 탐방예약제\* 확대, 모바일 예약시스템 개발(8월)
  - \* ('16)3개구간→('17)10개구간(누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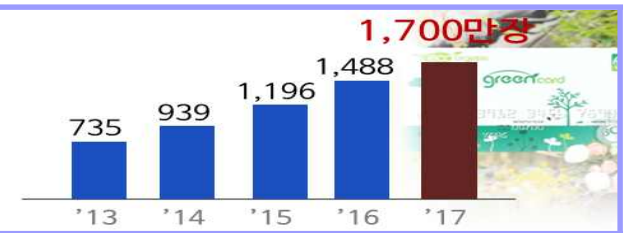
### 녹색 소비·생활

- 생활밀착형 제품 환경표지 인증기준 마련
  - \* ('16) 55개→('17) 60개 제품(누적)
- 녹색매장 확대 지정
  - \* ('16) 대형마트 350개→('17) 중소기업체 등 400개소(누적)
-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확대\*, 그린카드 제도 중국 진출(3월)
  - \* 에너지절약(가정 등)→친환경운전



소비자 빈병 반환율

그린카드 발급현황 (누적)



### 3. 미래 환경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.

#### 1 신기후체제 출범 대응기반 구축

##### 온실가스 감축

- 파리협정 후속협상 국가 제안서 UN제출(5월)
  - \* 감축목표 검증체계, 탄소시장 등
- 지자체 '30년 감축목표 및 로드맵 수립지원(6개시·도)
- 배출권거래제 감축실적 적합성평가(MRV) 협의(5월)
  - \* 산정·보고·검증

##### 저탄소 에너지 확대

- 친환경 전원믹스 강화추진
  - \*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협의시 미세먼지·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반영
- 육상풍력 입지 환경성평가 제도 개선(산업부 협업)
  - \* (현행) 先 입지결정 후 환경평가 (개선) 사전협의 후 입지결정

##### 기후변화 적응

-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(9월), 국가환경위성센터 준공(11월)
  - \* 정지궤도 환경복합위성 발사('19년)
- 취약성 평가지도 개선(11월)
  - \* (현행) 단순 기상관측자료 중심 (개선) 사회·경제적 영향 반영
- 취약계층 적응지원 시범사업 확대(('16)1천 → ('17)5천가구)
  - \* 단열개선, 쿨루프 등 설치

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'30년 BAU 대비 37%) 이행 및 적응인프라 강화

## 2

## 환경 신산업 발굴 · 육성

### 물산업

- 물산업진흥법 제정(6월)
- 해외시장 선점위한 R&D 투자전략 마련(6월)
- 물산업클러스터('18년 완공) 운영계획 수립(12월)

### 기상산업

- 실시간 기상·기후 빅데이터 공개 확대
  - \* ('13)5종 → ('16)7종 → ('17)9종(누적, Open API)
- 날씨경영 우수기업 지정\*(컨설팅·마케팅 지원)
  - \* ('15) 153개소 → ('16) 175개소 → ('17) 250개소(누적)

### 친환경차 산업

- (전기차) 다량 수요처 발굴(장기렌트 등 6천대) 및 충전소 확충(고속도로 휴게소, 공공주택 등)
  - \* 구매보조금: ('15)501억원 → ('16)1,482억원 → ('17)2,060억원
  - 급속충전기(공공): ('16)750기 → ('17)2,610기(누적)
- (수소차) 택시·카셰어링 시범사업(울산·광주 35대) 및 세금감경(1월~, 개소세·취득세 720만원이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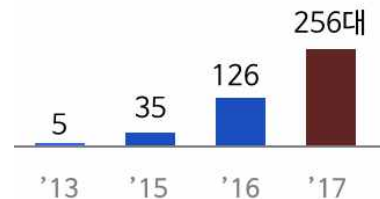
### 생물산업

- 나고야의정서 대응법령\* 제정·시행(6월)
  - \*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
- 고유 생물자원 발굴
  - \* ('16) 4만 7,003종 → ('17) 4만 8,600종 → ('20) 6만종(누적)
- 생물소재 대량증식 기술개발
  - \* ('16) 신규 13건 → ('17) 24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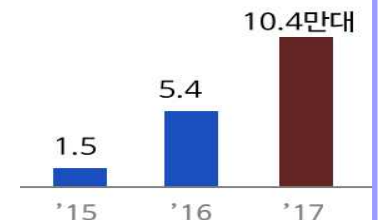
전기차  
(누적)



수소차  
(누적)



하이브리드차  
(누적)



3

###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

## 기 발굴된 유망 해외 프로젝트('13년~',370여건)의 국내 기업 수주에 총력지원

#### R&D 혁신

- 성과제고를 위한 연구관리 혁신방안 마련(2월)
- 환경난제 해결 중장기 R&D 투자전략 마련(4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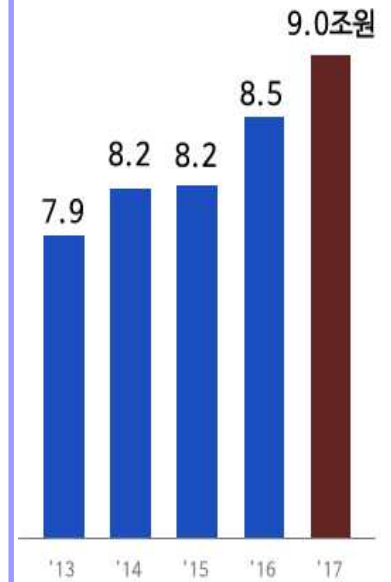
#### 강소 환경 기업 육성

- 신기술·시제품 실증·상용화 테스트베드 구축(5월)
  - \* 환경산업연구단지(18만㎡, 인천시)
- 유망 중소기업 프로젝트 수주시 자금애로 해결(6월)
  - \* 미래환경산업펀드 출시(6월 330억원, '21년까지 5천억원 규모)

#### 해외진출 지원

- 국내 환경기업 공동 수출실적 축적·공유 시스템 구축 (~6월, 환경분야 전문무역상사 지정)
- 중국 10개省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(~'18년)
  - \* ('16)산동·섬서·광둥·하북성 → ('17)산서·요녕성·내몽고

환경산업  
수출액  
'17년 9조원



# 4

## 노후 환경 인프라 현대화

### 조치가 시급한 시설 재정투자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

#### 재정사업

- 노후 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착수
  - \* 22개 군지역, 745km 국고 512억원
  - ※ '17~'28년간 총 3조 962억원(국고 1조 8천억) 투자
- 노후·파손된 하수도시설 교체·정비
  - \* 95개시군, 500km 국고 2,310억원
- 도심침수우려지역 하수도 정비 추진
  - (하수관 키우기,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)
  - \* ('16) 3개소 → ('17) 8개소(누적)

#### 민간투자

- 수질·하수도 분야 민투사업(BTO) 추진
  - \* ('15) 712억원 → ('16) 567억원 → ('17) 616억원
  - ※ '17년 13개소 (공공 폐수처리시설 6개소, 하수처리장 4개소,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개소 등)
- 환경분야 신규 민투사업(BTL 등) 활성화 방안 마련(3월)
  - \* 재활용시설, 폐기물처리시설 등

**노후 상·하수관로 정비 투자비율(전체 상하수관로 예산대비) 확대**  
 ('15년 12.7% → '16년 27.3% → '17년 35.5%)

## 4. 새로운 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환경질을 개선하겠습니다.

### 1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 정착

'16년 시행 첫해 환경책임보험 가입률 98%(16.12월말 기준)

**제도 개요** 【기업배상】 환경 책임보험(3백억원 이내), 직접배상(~3천억원), 구제급여(3천억원 초과)  
【정부구제】 구제급여 지급(원인제공자 미상·부존재·무자력 피해, 배상책임한도 초과 등)

####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선

- 업종·규모별 보험요율 차등화 및 온라인 가입시스템 개발(4월)
- 단체계약상품 출시(6월, 방지사설 공동사용자)
- 대상시설\* 및 의무가입시점\*\* 합리화(6월)  
\* 소형·휴업시설 제외 \* 인허가→가동개시신고

#### 피해자 배상·구제 활성화

- 피해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(6월~)  
\* 건강영향조사 등 기존 조사에서 피해 인과관계가 확인된 질환(진폐증, 중금속 중독증 등)
- 건강영향조사 연계 피해 인과관계 입증지원, 취약계층 법률자문·소송비용 지원(1월~)

리스크 분산으로 지속가능 경영(책임보험), 피해자 사각지대 해소(구제급여)



## 2

# 통합환경관리제도 본격 시행

## 제도 연착륙을 통한 산업계 환경경쟁력 제고

### 제도 개요

【허가신청】 10개 개별허가

1개 통합허가

【사후관리】 1회성 적발·단속

상시 기술지원

**'17년 대상업종**

(발전·소각·증기생산)

### 제도 이행 지원

-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지원(25개소)
- 사업장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운영(3월~)
  - \* 법정교육 30회, 전문교육 2회(반기 1회)
- 사업장별 기술진단(5월~, 30개소)

### 인프라 고도화

- 통합환경허가시스템·콜센터 개설(1월)
- 통합관리 사업장 정밀 DB 구축(11월)
-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(12월)
  - \* 철강·비철금속·유기화학('18년~)

행정비용(인·허가 등) 15% 절감 및 오염물질 10% 감축

\*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기준

3

###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준비 마무리

#### 산업계 협업을 통해 제도 시행기반 구축

**제도개요** 【순환자원 인정제】 폐기물 규제 종료(고철·폐지 등 일부 품목)  
 【매립·소각 부담금】 소각·매립비용 < 재활용비용 ⇨ 소각·매립비용 ≥ 재활용비용

#### 인프라 구축

- 하위법령(안) 마련(3월) 및 입법(~12월)  
\* 자원순환 협의체 구성('16.9월~, 재활용업계 등 참여)
- 부담금 부과·징수시스템 구축(12월)
- 재활용업계 용자확대(경영안정화 자금 등)  
\* ('16) 1,036억원 → ('17) 1,329억원

#### 시행 준비

- 자원순환성과관리제\* 시범사업(4개소)  
\* 사업장 대상 매립·재활용 목표설정-이행실적 평가
- 매립·소각부담금 모의적용(4월, 100개소)
- 직매립제로화 기반시설 확충  
\* 재활용선별장: ('16) 11개소 → ('17) 28개소(누적)

'20년까지 1.7조원 규모 재활용 시장(일자리 1만여개) 추가 창출

\* '15년말 기준 20조원, 출처 : 한국환경공단

# 4

##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

### 현장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화학사고를 대폭 감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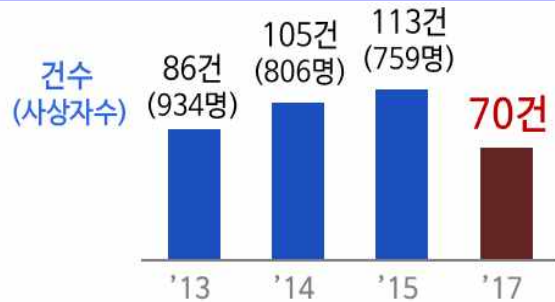
#### 현장이행 점검

- 위해관리계획서 승인 전·후 현장점검 확대
  - \* 사전점검비율: ('15) 0% → ('16) 1.6% → ('17) 5%(누적)
- 고위험 사업장 선별·집중점검(6월, 300개)
  - \* 사고이력, 시설 노후도 등 반영

#### 중소기업 지원

- 대·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\* 운영지원
  - \* 기업간 안전·방재장비 공유, 사고예방 컨설팅 지원
-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지원(150개소)
- 중소기업 화학안전 컨설팅 확대
  - \* ('16) 1,019개소 → ('17) 2,000개소

화학사고  
35% 감축  
( '15년 대비)



화학안전  
공동체



## IV.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성과확산 방안

현장과의 소통 확대와 집행력 강화를 통해  
국민이 만족하는 환경정책의 성과를 도출

## 성과 확산 방안





As is

To be

감사합니다

